

오피니언

특별기고

클 찬드라 가우텔



Sector Service Center)를 조직했다. 그 뒤로 30년 동안 시민운동에 힘써온 그는 네 팔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유엔 자화합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의 인상 깊은 이력 중에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UHCHR) 사무실을 네 팔에 개설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네 팔왕정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등의 인권활동을 펼쳤다. 요즘 들어 그는 '롤백철수'(rollback v-

광주의 영혼이 네 팔과 한국을 묶다

작은 마을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지하운동이 한창이었다. 파쿠벨은 당시 교사이자 운동가였다. 네 팔 또한 당시 독재체제 아래 있었다. 민주주의를 향한 파쿠벨의 열원은 광주의 영혼과 닮은 구석이 많다. 한국의 예에서 보듯이 네 팔정부 또한 1990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다정당 체제를 이루어냈다. 파쿠벨은 당시 운동의 보병 역할을 해냈고 훗날 네 팔에서 가장 크고 저명한 비정부 인권기구인 시민인권지원센터(Informal

olence)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운동은 범죄행위가 정치화되고 정치가 빈번하게 범죄조직화 되어가는 오늘날 네 팔을 보았을 때 매우 절실한 사회운동이다. 1990년대 파쿠벨과 그의 동지들이 이루어낸 네 팔의 다정당 민주주의는 단명했다. 90년대 중반 쪼고 급진적인 혁신운동가들로 이루어진 네 팔의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추종하며 내전을 불러 일으켜 의회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북한의

'주체' 모델과 비슷한 '인민공화국'을 정립시켰다. 이에 대항하는 세력은 결국 네 팔의 절대왕정 체제를 복원시켰고 이는 다시 무분별한 폭력과 반폭력 세력 간의 충돌로 인한 1만5000명 가량의 사상자를 초래했다. 이는 결국 네 팔의 경제 인프라와 사회 균형을 산산조각냈다. 수실 파쿠벨의 업적은 2006년 네 팔 왕가와 공산반군 사이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진보적인 공화당성격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7개의 정당과 마오리스트 사이의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고 부정선거감시와 인권신장과 관련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에도 주력했다. 새롭게 탄생한 네 팔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유약하며 불안정한 평화와 위태로운 인권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의 영혼은 아직도 네 팔에서 유혹하다. 파쿠벨과 광주인권상의 명에는 네 팔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과 같은 체제가 아닌 안정된 경제와 사회진보를 표방한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것을 되새겨준다. 네 팔과 한국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적교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영혼이 이들을 더욱더 가깝게 묶어 줄 것을 기대한다. <전 유엔 사무처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다산포럼

강명관



했다 것이 아니라. 이익이 높기 평가하는 그 시대는 북송 초기다. 이익은 6대 신종(神宗) 때부터 재상이 개봉에 호화스러운 저택을 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방의 인제가 조종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과야 익히 아는 바이다. 힘을 잃은 송나라는 요나라, 금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려 재정 이 바닥난다. 국토를 빼앗긴 것은 물론 개봉까지 함락되고, 금기가 황제인 휘종, 흠종까지 만주 오국성(五國城)으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는다.(하기가, 무

것이 좋을 것이라는 번지래한 말로 표를 낚아 국회의원이 된다. 그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이 이처럼 축적이 되었을까? 이익은 글의 말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만약 백성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치를 억제해야 한다. 사치를 억제하는 방법은 현자(賢者)를 찾아내는 데 있다. 현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사욕(私欲)을 막는 데 있다. 사욕을 막는 방법으로는 송나라 제도보다 좋은 것이 없고, 효과도 이미 분명하다." 요즘 대한민국 사정으로 풀어서 보면 이러하다. 국민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려면, 돈 많은 부자 정치인의 진출을 막아야 하고, 혈연·지연·학벌에 의한 소수의 권력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어보자. 돈 많은 부자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또 정치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혈연·지연·학벌 집단이 과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의 정계 진출을 바라겠는가. 강남에 빌딩이며 아파트를 소유한 고급 관료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정책을 세우겠는가? 아마도 셋방살이를 하는 정치인이 대거 출현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런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재상의 셋방살이

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경우를 들고 있다. 제도는 실제로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익은 이 외에도 몇몇 예를 더 들고 있지만, 끝까지 간다. 재상의 아들 개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국가는 보다 폭넓게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익의 견해다. 이익은 같은 글에서 당시의 벼슬아치들은 모두 자기의 집이 없어, 재상일지라도 수도 개봉(開封)에서 집을 짓지 못하고 셋집을 얻어 살았다고 한다.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 집중되지 않고, 또 재상이 셋집에 살 정도로 깨끗하였으니, 사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정에는 명분이 있고 일처리로 공평

능한 황제가 죽은 것이 무슨 대단한 비극이겠는가마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특정한 학교의 졸업자가 관료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시리라 믿는다. 더욱 갑갑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대부분 해당 지역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주민의 인정을 받아 의원으로 선출되어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난데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서울 사람이 이 지역과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더라면(대부분 개미허리보다도 빈약한 관계다) 불속 나타난다. 그리고는 힘 있는 사람을 뽑는

기고

최흥규



송을 통해 수원이 없는 물부족 지역에까지 물을 제때에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토 해양부와 K-water에서는 지난 1981년 이래로 지역에 구분없이 동일 요금을 부과해 공급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물 사용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둘째로 광역상수도는 다목적댐 등 대규모 취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용수 수요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가물

넉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교우위에 있는 광역상수도의 다양한 이점에도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상수도 개발 등으로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적정 수준(75%) 이하인 실정으로 그간 투입된 대규모 국가예산은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2009년 말 국토 해양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비상 연계시설 확대 등 수도시설 개선과 미래 수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번 계획에서 그동안 주로 다뤄져 왔던 시설 규모 확장에서 벗어나 좀 더 '수요자 중심'의 국가계획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21세기형 수도시스템 구축'의 목표 아래 안정된 물공급과 안전하고 맛있는 수질,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경쟁력을 갖춘 광역상수도의 미래상에 큰 기대감을 가져본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광역상수도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수도 시스템이다. 지방 상수도는 한 개의 지자체에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비해, 광역상수도는 한 번에 여러 지역의 지자체에 동시에 공급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광역상수도는 초기 시설투자비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지방 상수도가 가지지 못하는 수준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여러 지자체를 거친 장거리 물 수

송을 통해 수원이 없는 물부족 지역에까지 물을 제때에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토 해양부와 K-water에서는 지난 1981년 이래로 지역에 구분없이 동일 요금을 부과해 공급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물 사용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둘째로 광역상수도는 다목적댐 등 대규모 취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용수 수요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가물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0돌을 맞는 날이다. 1980년 그날, 민주와 인권, 평화의 햇빛을 높이 들며 피로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한 세대가 지난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에 맞서 목숨을 바친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며 다시 한번 웃기를 여민다. 5·18은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다. 민초의 힘으로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룬 바탕에 5·18 정신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때문이다. 하지만, 5·18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공식 사망자가 수확되지 않고, 발표 명령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등 희생자의 원혼조차 말끔히 달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과 광주 시민은 이념논쟁의 골레 속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5·18에 대한 편파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이다. 일부 세력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5·18을 '북한 세력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 악의적으로 왜곡·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퍼 나르고 있다. 실제로 5·18 기념재단이 최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글을 조사한 결과 18%가량이 부정적 글이었다고 한다. 5·18 영령들이 지하에서 툭타할 일이다. 5·18 30주년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도 유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교 일정 이 잡혔다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국가 기념일에, 그것도 30돌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기념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난 2008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은 지금과 같은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초석이 됐다"며 5·18을 선진 일류국가로 건설하는 정신적 자부

발전시켜 나가자고 한 게 이 대통령 자신이 아니었던가. 뿐만 아니라 보훈처는 6년 전부터 공식 추모곡으로 제창되어 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본 행사 추모곡에서 배제했다. 행정안전부는 한 술 더 떠 공무원노조의 광주 순례 참가를 막고, 더 나아가 참가자를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5·18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죽했으면 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이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겠다고 했을까. 이 같은 5·18에 대한 온갖 왜곡과 폄하에도 '오월, 광주'의 송고한 정신과 이념은 결코 퇴색되지 않을 것이며 세계 역사에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광주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인권도시'로 우뚝 서고, 올해 기념재단이 공모한 국제 인권단체 지원사업에 아시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50여 개 단체가 신청한 것에서 보듯이 날로 높아지는 5·18의 국제적 위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5·18의 정신과 가치는 세계인 사이에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흥하고,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단호히 3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진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며 영사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역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30돌에

다. 따라서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해 5·18을 현재와 미래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으로 살려내야 한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민주화의 원동력인 '오월의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세대를 마감하는 30돌을 계기로 민주, 인권, 평화라는 소중한 자산을 더욱 확산·계승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6·2 지방선거전이 뜨겁다. 모든 선거는 당락이 갈리는 것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생사를 다룰 정도로 과열되기 쉬운 선거판에는 항상 부정적인 요소가 도사리기 마련이다. 과거보다는 맑아졌지만 금품과 향응제공은 지 금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바로 유언비어(流言蜚語)다. 특

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의 '데마고고스'(demagogos)에서 유래했다. 데마고고스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가 또는 웅변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애초 의미가 대중에게 과대한 공약을 내세우는 선동(煽動)의 뜻으로 변질됐고, 이를 행하는 정치가를 '데마고고'(demagogue)라고 부른다. 선동

데마고기



정 후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나 풍문이 가결어린 상태에서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등장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일부 지역에서는 유언 비어보다 더 저질스러운 '데마고기'(demagoggy)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유언비어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데마고기는 특징인을 겨냥해 유권자의 의식을 조작하기 위한 의도된 거짓 정보인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데마고기는 유언비어에 비해 계획적이고 매우 악의적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커진다. 데마고기는 '시민·민중의 지도자'라

정치가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반면, 상대 세력의 부당성이나 부족함을 날조하는 데마고기를 선호한다. 문제는 반사회적인 데마고기가 때때로 먹혀들어가다는 점이다. 선거운동이 무리되면서 곳곳에서 데마고기 조짐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득표전에 들어가면 유언비어 수준을 넘어 데마고기가 출현할 가능성도 크다. 데마고기를 경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느니의 여부가 곧 유권자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박치영 사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